

전통시장 · 산업단지 안전점검 강화

중기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회의 가져...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4일 김우중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국립공업고등학교, 산하기관의 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열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의 후속 조치로, 수해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침수에 취약한 전국 전통시장 약 3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정비, 차수판 설치,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했다. 특히 침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누전과 화재 등 2차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노후 공장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해 점

검 대상을 주요 산업단지와 공단 시설까지 확대했다. 과거 집중호우 피해 이력이 있는 산업단지 내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은 청사 내 전기·소방 설비를 보완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는 교내 누수 예방과 급식실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도 재정비했다. 중기부는 재

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야간과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통시장 상인회 간 실시간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했다.

한편 중기부는 장마와 태풍 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일스톱지원센터'를 즉시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벨라시타에서 열린 '강릉로 삼삼마켓'에 참가해 총 2억6,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북수산물, 수도권 소비자 인기

경기 고양시 열린 소비촉진 행사 성황... 매출 2억6500만원 달성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가 마련한 수도권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전북 수산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벨라시타에서 열린 '강릉로 삼삼마켓'에 참가해 총 2억 6,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한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의 장을 운영했다.

행사장에서는 김과 장어, 꽃게장 등 전북을 대표하는 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시중가보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앞세운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행사 기간 내내 활발한 구매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생산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20개 수산업체가 참여해 다

특히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직송 방식으로 신선도와 품질을 높인 상품들이 큰 호응을 얻으며 매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맞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개발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23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

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전력

구매계약(PPA) 모델을 도내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는 KIST 전북분원 건축물 옥상에 6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향후 25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전력

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반 전력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물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확보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체 생산 전력 활용으로 전력계통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관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ESG 윤리청렴경영 실천서약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윤리청렴경영 실천 다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사회와 국민 앞에서 윤리청렴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관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ESG 윤리청렴경영 실천서약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원의 청렴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의지를 대내외

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공공 및 국민 참여제도에 따라 국민참여혁신단이 참석해 기관의 ESG 윤리청렴경영 실천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ESG 윤리청렴경영 실천서약에서는 참석자들이 서약보드에 직접 서명하며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중장년 · 1인 창업기업 수출 역량 강화 나선다

전북지역 중장년 및 1인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교육과 상담회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익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전북소상공인회관에서 '글로벌 판로 토크(Talk-Talk) 수출 교육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초기 창업기업의 수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의 첫 걸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FTA통상진흥센터와 협업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수출 절차 및 거래조건 △국가별 인증 및 규제 대응 △FTA 협정별 관세율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 기업별 맞춤형 1대1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레전드 50+'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주력산업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5일부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농생명바이오와 탄소융복합소재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5,110만 원으로 약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술지원 분야 최대 3,500만 원, 사업화지원 분야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두 분야를 패키지 형태로 신청할 경우 기업당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6시 까지 가능하며, 공모문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RMS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기준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특례 조건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나 과도한 조건은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부가되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기업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특례에 부여되는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모호하게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평가 지표 도입, 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